

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 6호)

○ 2018. 09. 07.

○ 행정복지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08. 10. 김안숙의원 외 4인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08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2018. 09. 07.

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안숙 의원)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심경석)

-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,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 약 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, 이들이 겪고 있는 각종 폭력이나 어려움 등은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, 2017년 ‘학업중단자 수’는 서울특별시 8,470명, 경기도 14,330명, 인천광역시 2,346명, 부산광역시 2,459명 등 총 47,663명인 것으로 나타남.
☞ 강남구(1,295명), 서초구(1,041명), 송파구(984명), 노원구(643명) 등

- 학업 중단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등을 초래하여 개인적·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.
- 정부는 2013.10.30.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 개정을 통해 ‘학업 중단 숙려제’를 의무화하고, 2014.5.28.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을 제정하여(2015.5.29. 시행)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·교육 등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음.
-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·광진·구로·금천·동대문구 등 총 16개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,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에 근거한 계획으로서 지원사업의

추진방안,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5조(지원 사업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, 교육 지원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‘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’ 설치하되, 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 제10조에 따른 ‘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’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(지원센터의 설치)에서는 근거하여 구청장은 ‘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단체 등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교육·직업체험 및 취업·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.
- 안 제8조(지원센터의 위탁)에서는 안 제7조(지원센터의 설치)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9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

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, 경찰서 등과 긴밀히 연계·협력하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)에 부합되는 규정임.

- 본 제정조례안은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> 제7조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정 장소나 센터가 준비되어 있는지?

답>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청예단에서 센터를 위탁 운영중에 있음.

질>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?

답> 교육청, 경찰서, 상담센터에서 통보를 하고 있음. 교육청에서 통보 할 때는 본인 동의를 있어야 통보가 되고 있음.

질> 본의 동의를 없으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는지?

답> 100%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어 하반기에는 체계적

으로 실태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짜구정리내용 : 없음